

文 “집무실 예비비 조속 처리”…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

6일 오전 10시 金총리 주재...360억 안팎 규모 靑 “안보 공백 이전 좁혔다...합참 이전은 제외”

정부가 오는 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

다. 규모는 36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비비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정부에서 ‘안보 관련 사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논의 결과) 안보 공백에 대한 이전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 예비비 상정 가능

성과 관련해서는 “점차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행정안전부·국방부·대통령경호처·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간 실무작업이 있었고, 전날 정부는 전해칠 행정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을 검토했다.

당시 정부는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후 행안부와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 예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산 관련 조율을 마무리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예비비에서 제외된 합참 건

물 이전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나머지 비용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최이슬기자

장제원 “비서실장, 정무감각·경륜있는 분...저는 여의도로”

“삼고초려해서 모실예정...여러 분 접촉, 접촉된 분들 고민 중”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저는 여의도로 돌아간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시려고 한다”며 “여러 분 접촉 중이고, 접촉된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너무 곤란하게 하는 기사는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제가 인사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의도로 돌아간다

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 단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배수든 3배수든 5배수든 검증(자료)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에서 그걸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여드리고 낙점을 받으면 통보하고 당선인과 만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 절차가 진행된 부서는 없다”고 했다. 다만 1개 부처는 장관 후보군이 검증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실장은 해당 부처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 비서실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조직법 체제 내에서 인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도 진행하는지 질문에는 “그건 좀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청와대(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조직 문제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사회정책과 정무, 그리고 기본적인 비서실 인력을 세평작업과 스크린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책파트가 없으면 각 부처간 조율을 어떻게 하나. 정책 파트가 없을 수는 없고, 정무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존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서선욱기자

인수위 “불법공매도·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계획 포함”

법무부, 불공정 거래 행위 엄정 법률 적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일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계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다”며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보고가 있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사경 인력 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16명인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 직무범위에 검찰 지휘 패스트 트랙 사건, 즉 긴급한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 의견을 생략하고, 검찰 송부 사건 이외에도 증권위 고발·수사 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2년 3월 말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고 전했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법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범죄 수익 환수부 및 범죄 수익 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 공약이다”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